

위약금 액수 눈치싸움... 실익 없고 부담 커 소송까진 안갈 듯

F1조직위-FOM 'F1 위약금' 분쟁 어떻게 되거나

F1 조직위원회가 올해 F1 소송에 대비해 변호사비로 3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F1 대회 청산 절차에 착수했다는 의미다. 이제 F1 대회 주관사인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와의 위약금 협상 및 소송, F1 대회 백서 발간 등 평가 등만 남게 됐다.

F1 조직위와 FOM간 체결된 계약서상 위약금은 전문학적인 액수로, 지난해 몇 차례 협상을 갖고 조율을 시도했으나 의견 차이가 커 무산된 바 있다. 계속 협상에 나설 것인지, 결렬을 선언하고 곧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양측 모두 상대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고 있

고, 소송의 실익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다르기 때문이다. 양측은 지난해 6월 공식 접촉에서 위약금 액수를 둘러싼 의견 차를 확인한 뒤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F1 조직위와 FOM, 협상 앞서 '눈치보기'=FOM이 요구한 위약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계약을 위반하면 '2년치 개최권료'를 위약금으로 물게 돼 있었지만 지난해 2월과 6월 협상을 거치면서 FOM은 1년치 개최권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1년치 개최권료는 4374만달러, 한화

FOM 위약금 530억 요구

작년 6월 접촉후 진전 없어 조만간 협상 테이블 앉을듯

로 530억8000여만원(1월21일 환율 적용)에 이른다.

이에 대해 F1 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불가피하게 F1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점, 그간 4년간 개최권료로 1970여억원을 FOM에 지불한 점, 전남(영암) 대신 아제르바이잔에서 F1 대회를 개최해 FOM에 손실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FOM의 요구대로 위약금을 줄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후 F1 대회 조직위는 FOM의 요구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제시했지만 이 역시 FOM측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중단됐다. 이후 2016년 대회와 관련 지난해 11월 말까지 전남도가 대회 개최에 선행조건인 (영국은행)신용장 개설을 하지 않았고, FOM이 2016년 대회 일정에서 한국대회를 제외하는 등 양측은 대회 정리수순에 돌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측 모두 위약금에 대해서는 합구하고 있는 상태다. 먼저 제시하는 쪽이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눈치보기'에 나선 모양새다.

◇소송 부담 커 조만간 테이블 앉을 듯 =F1 조직위는 FOM이 F1 대회 미개최에

따른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소송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FOM측은 신용장 미개설을 문제삼고, F1조직위는 이에 맞서 불합리한 계약 조건과 다른 개최지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 과정에서 지금까지 비밀을 지켜왔던 F1대회 계약 내용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FOM측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개최국가들도 개최권료 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송 당사자가 될 F1조직위의 자산이 거의 없어, FOM으로선 승소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F1조직위의 경우, 국제소송을 진행시키면서 파소할 경우 경제적·행정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 협상을 통해 일정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액수를 둘러싸고 지역 내부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게 고민이다. F1 조직위 관계자는 "지난해 협상 후 FOM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이 없다"며 "소송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 논리를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F1 대회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개최됐고 2014년과 2015년에는 열리지 않았다. 의무 개최기간이 끝나는 올해도 열리지 않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대중 정신 계승해 기득권 양당구조 바꾸겠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전남도당 창당대회 ‘호남 세몰이’

광주시당위원장 김동철·조정관, 전남도당은 황주홍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가 21일 광주시당·전남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호남(嶺) 세몰이(發)에 나섰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보성 다향체육관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잇따라 전남도당 창당대회와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호남 공략에 나섰다.

첫 창당대회 장소로 호남을 택한 것은 '안철수' 친원자인 호남을 중요시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최근 뼈저리게 있는 당의 분열기를 다잡기 위한 여러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창당대회에 앞서서 전통 시장을 찾는 등 호남 바닥 민심 살피기에 공을 들이기도 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한상진 공동 창당준

비위원장과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김영환 전략위원장, 주승용·황주홍·김승남·장병안·임내현·권은희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 9명이 참여했다. 주승용 의원은 국민의당 합류 이후 처음으로 당 공식일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창당대회에는 각각 당원과 지지자 30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당은 김동철 의원과 조정관 전남대 교수가 초대 공동위원장으로 전남도당 위원장은 황주홍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당 인사들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과 호남 정신을 강조하며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상진 위원장은 이날 창당대회에서 "국민의당은 퇴행적인 집권여당에 맞서서 맹렬하고

강력하게 싸울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희들에게 남긴 '행동하는 양심'이 없는 오늘날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과도 결연히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더민주 김종인 위원장의 전두환 국보위 참여 이력을 언급하며 "국보위 참여자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더민주를 도저히 묵과하거나 용서할 수 없다"고 더민주를 비판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20년전 김대중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깃발로 우리 역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룩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 말씀하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은 계속돼야 한다"며 국민의당이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기득권 양당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정치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번 총선은 그런 구조를 깨 회의"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21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광주시당 창당대회에 앞서 5·18 정신실천연합 회원들이 전두환 신군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주역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사과 없는 핑계...광주시민 결코 용납 못해”

김종인 국보위 전력 해명 비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최근 전두환 신군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이하 국보위) 활동 논란과 관련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활동 전력에 대한 사과 없이 당위성만을 강조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민의당이 자신의 국보위 전력을 연일 비난하는 것과 관련, "부가가치세 문제 자문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국보위와 같은 비상적인 기구에서 세제를 다루면 큰 혼란이 올 수 밖에 없다. 내가 가서 (부가

세 폐지를 하면 안된다고 설득을 해서 방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간 것이지, 권력이 탐이 나서 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5월 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창당을 추진 중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 위원장의 국보위 참여 전력과 관련, "광주 시민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보위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광주항쟁을 학살로 종료한 직후인 5월 31일 출범했다"며 "광주 학살의, 광주 시민들의 피를 딛고서 만들어진 쿠데타 기구

가 국보위"라고 말했다.

5·18 기념재단 등 5월 관련단체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공식적인 사죄를 하지 않는 한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자치 21도 이날 '한국정치, 보수 정체성으로 도배돼 되는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국보위 참여와 박근혜 정부의 민생파탄과 유신시대 회귀에 책임 있는 사람이 마치 점령군처럼 진보와 호남을 평가하듯 하는 것은 호남민심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국민은 강한 야당 원해”...박영선 더민주 잔류 선언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21일 "새정부를 위한 강한 정통야당 더민주를 지켜봐 달라"며 당 잔류를 선언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의 자리에 남아, 오랫동안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을 쏟아온 경제 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한 일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새 정제를 위한 경제정당으로의 변신이 절실하며, 국민적 갈망이 담긴 경제민주화의 길, 그 실천가

능성이 더민주당에 찾아왔다"며 "제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위한 경제민주화와 정치혁신의 길에 미력하나마 매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을 떠나신 분들과 새로 오신 분들 모두가 소중하다"며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야 할 식구라는 마음을 잊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야권을 통합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자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변화를 위해 자갈밭길을 선택했다"며 "변화를 향한

간절함이 꼭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서로 승리하는 길을 찾아 대한민국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은 MB(이명박 전 대통령)세력을 흡수할 것 검토하는 등 중도로서의 행보를 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건 강한 야당"이라고 잔류 배경을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레이저백내장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정확도와 안전성이 현저히 높은 최첨단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입니다. 3D OCT가 탑재된 펄스레이저를 사용해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훨씬 빠르고 오차 없는 수술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無출혈 / 無통증 / 無봉합 / 無입원이 가능하며 검사부터 수술까지 하루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바운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증-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